

퀴바디스, 피시스

- 평화교육 편 -

이선향, 권순정, 문아영, 이삼열

이 기획은 ‘평화들’에 대한 다양한 속고와 관점을 보여주기 위해 질문과 대답 형식의 시리즈로 마련된다. 이 기획은 한 질문에 여러 견해와 성찰을 담는 형식을 취한다. 이번 3호는 한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평화교육’을 토론한다.

이번 호에는 네 개의 질문에 평화교육학자 3인이 답한다: 이삼열(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권순정(한국외국어대학교 객원강의교수), 문아영(피스모모 대표). 질문은 편집위원장 이동기(강원대 교수), 편집위원 송영훈(통일강원연구원 원장, 강원대 교수), 강혁민(이화여대 박사후 연구원) 등이 마련했다. 3인의 평화교육학자들은 해당 질문을 놓고 토론회를 가졌고(주최: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일자: 2022년 10월 25일/ 사회: 이선향(강원대 교수)), 그 후 그들은 원고 형식의 답지를 제출했다.

이선향: 평화는 사회 규범이나 정치 질서의 지향을 넘어 삶의 습속이자 인간의 능력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평화교육의 전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교육은 학습자에게 막연히 갈등 없는 이상사회를 꿈꾸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도덕적 인간의 형성 내지 선한 시민의 육성 같은 윤리교육이나 인성교육 같은 것도 아닐 것입니다. 선생님은 평화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화를 교육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정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은 평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평화교육의 철학적 토대 또는 교육적 전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울러 평화교육은 인권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 교육이나 세계시민교육과 어떤 점에서 같고 다르다고 보십니까?

이삼열: ‘평화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인성과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평화교육이라고 하겠고, 다음은 나 혼자 평화롭게 산다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회 속에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길러주는 것이 더 중요한 평화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정의는 관점과 중점이 서로 다른 데서 나타나지만, 평화교육의 올바른 정의는 양자를 결합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로운 인성을 습득한다고 해서 인간관계나 사회관계가 다 평화로워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사회적인 평화 능력을 지녀도 스스로 평화롭게 못한 성격과 행태를 가진 경우도 있으니까 양자는 서로 결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넓게 보면, 거의 모든 교육이 평화교육에 해당합니다. 평화 개념이 워낙 넓기 때문이죠. 평화가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너무나 많고 다양한 정의가 나옵니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샬롬의 개념을 연구한 독일 신학자 클라우스 베스터만(Claus Westermann, 1909-2000)에 의하면 20여 가지의 뜻을 내포한다고 합니다.¹⁾ 안전, 질서, 복지, 발전, 인권, 정의, 사랑, 구원, 건강, 안전 등 그 모두가 다 평화의 조건이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는 교육은 모두 평화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 발전교육, 인권교육, 건강교육이 모두 평화교육의 넓은 범위에 들어갑니다. 또 평화로운 인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도덕교육, 윤리교육이 필수적이며 심리교육도 해야 하니, 결국 그것은 모두 평화교육의 넓은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갈통의 ‘소극적 평화’ 정의에 따라 우선 평화를 ‘전쟁과 폭력이 없는 상태’라고 말한다면, 싸움과 전쟁을 하지 않고 타자나 타국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능력과 태도 및 가치관을 길러주는 교육을 우리는 평화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폭력을 없애려면 폭력을 초래하는 오해, 편견, 갈등, 적대상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상호이해 교육과 갈등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폭력과 전쟁의 현실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치고 바꾸면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능력을 기르자면 무관심과 절망을 극복하고 참여하며 행동하는 의식을 갖도록 해야하므로 의식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Claus Westermann, 1969, “Der Frieden (shalom) im Alten Testament”. in Picht, Georg and Heinz Eduard Tödt eds., *Studien zur Friedensforschung*. Bd. 1. Stuttgart: Klett Verlag, pp. 144 – 177.

다. 그것을 가장 강조한 사람이 파울루 프레이리(Paulo Freire, 1921-1997)입니다. 그는 주저 『페다고지』에서 제3세계의 억눌린 자들과 소외당한 자들의 해방을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과 억압 구조를 의식하게 만드는 의식화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말했고 그것을 평화교육의 전제라고 강조했습니다. 1970년대 유럽의 평화교육자들은 학회를 통해 ‘비판적 평화교육’, 즉 사회 구조 속에 있는 ‘구조적 폭력’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평화교육의 핵심으로 간주하면서 의식화 교육을 평화교육의 핵심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2차대전 후 1950년대 유럽의 평화교육은 적대관계를 친선관계로 바꾸는 국제이해교육이 중심이었습니다. 이렇게 평화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따라서 변화하고 발전해왔습니다.

권순정: 다수의 평화교육자들은 유네스코 헌장의 문구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은 인간의 마음속이다.”를 근거로 내세웁니다. 평화교육을 연구하고 있는 교육학자의 입장에서 이 신념을 근거로 삼는 것은 가장 타당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굉장히 모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화교육자 다니엘 바탈(Daniel Bar-Tal)에 따르면, 평화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모호함(elusiveness)입니다.²⁾ 평화교육은 구체화되지 않은 가치인 평화를 각자 맥락에 따라 개념화하고 그것에 맞는 교육활동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정해진 교육 목표나 성취 기준이 없습니다. 즉, 평화교육을 통해 평화를 교육한다는 것은 특정한 교수 방법을 실천하고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루었는지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 사회에서 교육을 논할 때, 과연 다양한 교육 정책과 제도, 학교의 문화, 교육과정 등을 배제하고 논의할 수 있을까요? 파울로 프레이리가 그랬듯이, 결국 평화교육은 이것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 그것들을 변화시킴으로 평화교육이 교육이 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평화를 교육한다는 의미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평화교육이 구조와 제도, 사회문화를 변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이는 교육운동 차원에서 실천될 수도 있으며, 다른 한편 교육 개혁(혁신)의 차원에서 생각해봐야

2) Daniel Bar-tal, 2002, “The elusive nature of peace education”, in G. Salomon and B. Nevo eds., *Peace education: The concept, principles and practice in the world*, Mahwah, NJ:Lawrence Erlbaum, pp. 27-36.

할 것입니다. 그중에서 여기서는 교육 개혁(혁신)의 차원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0여 년간 평화교육은 평화운동에서 하나의 교육정책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한계가 많고 평화교육이 충분히 확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저는 평화교육이 교육정책으로 실천되었다는 점 자체가 지닌 의미에 주목합니다.

진보 교육감들이 당선된 이후, 평화교육은 제도권 교육에서 어떻게 정책으로 만들고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게 할 것이냐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혁신학교를 시작으로 그동안 비제도권 교육 차원에서 한국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오던 운동들이 제도화되면서 변화의 흐름은 하향식 접근(top-down approach)으로 이행되었습니다. 이에 교육 개혁(혁신)의 내용이 학교 현장에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평화교육 역시 하향식 접근에 따른 비판을 마주하게 되었고, 유관 학문과 얽혀 다양한 오인을 강화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평화교육은 그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으로만 이해되거나 통일교육과의 관계에만 한정해서 이해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반면, 교육 개혁의 관점에서 평화교육의 주요 의제가 되는 민주주의와 인권은 민주시민교육과 학생 인권 정책으로 대표되어 평화교육과는 또 다른 정책의제로 분리되어 이해되었고, 이에 따라 평화교육에 대한 오인은 다시 한번 강화되었습니다.

덧붙여, 학교 현장에 평화교육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평화교육 활동으로 대표되는 회복적 생활교육, 갈등해결 교육, 비폭력 대화 등 교사들에게 낯선 경험들은 그동안 그것을 해오던 시민단체들이 학교 현장에 들어가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긍정적인 측면 이면에 교사 대다수와 관련 부서 장학사들은 또 하나의 사업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또한 신규교사들의 경험을 조사해보면, 예비교사 당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평화교육조차 1~2년의 경험이 쌓이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평가가 등장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들은 정책화된 평화교육과 교실에서 평화를 교육한다는 것 사이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 고민거리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것에 대한 비판은 차후에 하더라도, 우선 교육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프레이리가 얘기하는 ‘의식화’와 ‘해방’을 통한 사회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을 키우는 것

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교육이라는 의미에서 평화교육은 유네스코 등에서 제시하는 변혁적 교육, 변혁적 패러다임으로 논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교육정책의 중심에 있는 미래교육 담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데이비드 히кс(David Hicks)의 미래교육으로서의 평화교육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현재의 반-평화적인 요소들을 평화적으로 바꾸어 평화로운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그의 주장은 현재 미래교육 담론의 흐름과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평화교육에서 주요 개념인 학습자 중심, 비판적 사고, 교사와 학생의 민주적 관계(지식을 같이 구성하는 관계) 등 미래교육의 역량으로 대표되는 역량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평화교육이 주장해 오던 변화입니다. 따라서 미래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평화교육자들은 어떻게 평화를 교육하여 현재 변화해 가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육정책의 중심에 그 가치가 스며들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평화교육과 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시민교육 모두 같은 ‘변혁적 교육’이라는 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비전과 목표를 세우지만, 차이가 있다면 실천에 있어 그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적으로는 평화교육이라는 큰 우산 아래 여타 교육들이 존재한다고 보지만, 전략적으로나 우리가 학교에서 기대하는 시민양성이라는 관점으로 보자면 시민교육으로서 평화교육을 실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사실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실천의 방향이 달라지고,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개발교육의 관점으로 볼지, 변혁적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에서 볼지에 따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방향이 달라지는데, 평화교육은 후자의 관점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결국 평화를 교육한다는 의미를 도출하는 데 있어 평화교육과 시민교육의 관계는 무엇인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세계시민성과 민주시민성이 말하는 인지, 정서, 행동의 영역에서의 역량은 곧 평화교육이 기대하는 인간과 그 인간들이 모여 사는 평화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민교육은 시민을 양성하는 것에 방점이 있고 평화교육은 그것을 중심으로 더 나아가 문화를 전환하는 운동으로 확장되는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세계시민교육이나 지속가능 발전교육의 관점들이 가진 모순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그 관점들과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가며 궁극적으로 평화로운 사회와 문화를 정착시킬 것인가가 향후 평화교육이 책임져야 하는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아영: 저는 ‘평화교육’이라는 단어를 마주할 때마다 딜레마에 빠집니다. 평화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는 평화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나, 그보다 더 나은 단어를 찾지 못했고, 교육이라는 단어는 가르치고 기르는 일방적 행위라는 한계를 이미 담고 있는 단어임에도 사회와 소통가능하기 위해서 놓을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지향하는 ‘평화교육’을 가장 잘 포착하는 개념을 만난다면 ‘평화교육’이라는 단어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 ‘평화교육’이 다른 주제의 교육들과 유사한 점은 ‘시민성’이라는 주제와 맞닿아 있다는 점, 정량화되기 어려운 주제들을 다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평화교육’이 다른 주제의 교육들과 다른 지점은 ‘폭력’의 문제를 다층위적으로 다룰 책임에 있다고 봅니다.

사회가 변함에 따라 의제 역시 변하는데, 인권 담론은 복합위기 시대 인간의 권리를 넘어서는 권리에 관해 이야기해야 하는 요구를 받고 있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은 그 발전의 목표가 과연 지속가능성인지, 발전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모호함 속에 놓여 있습니다. 개념적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이 가장 적합한 개념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시민’이라는 단어가 매번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딜레마 ‘시민’과 ‘비-시민’의 이분법을 극복해야 한다는 한계도 짚지 않을 수 없네요. 또 민주시민교육이 실천되는 현장에서 시민성의 매우 핵심적인 요소가 변변히 빠져있는 것을 생각할 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개념 역시도 충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제가 말하는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적 결핍은 민주시민성을 이야기하지만 국가 독점의 군사안보에 대한 시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민주주의의 궁극은 국가/군대에 의해 독점된 안보의 문제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는 평화교육의 전제는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것이고, 이때의 모두는 인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

화교육이란 ‘존재들이 관계적 자기결정권을 덜 폭력적으로 행사하는 것’과 ‘차이를 수평적으로 조율하는 역량’에 관한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비인간 존재들과의 관계에 얽혀 있음을 인지하고 자기결정을 내리는 것,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사로잡히지 않고 ‘적’이라는 개념으로 단순화될 수 없는 수없이 다양한 존재들의 삶을 헤아릴 수 있는 역량, 셀 수 없이 다양한 차이들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그 차이가 수직적 권력과 결합하지 않도록, 다름을 수평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역량을 따로 또 같이 확장해가는 것이 평화교육의 주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향: 한국에서 평화교육은 오랫동안 통일교육과 긴밀히 결합되어 왔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평화지향 통일교육’, ‘평화통일교육’, ‘평화·통일교육’, ‘분단극복 평화교육’, ‘탈분단 평화교육’ 등의 개념과 관점들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통일 전망은커녕 남북관계는 적대와 대결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여러 여론 조사와 의식 변화 연구는 한국 사회 주민들에게서 통일 당위성이나 민족정체성이 현저히 약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특히 청년 세대에게서 뚜렷하지만, 여타 주민 집단에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한국의 평화교육도 분단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통일’ 과제나 ‘탈분단’ 지평이 아니라 적대성 극복과 화해 공존의 전망에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과거 통일 전 서독의 경우처럼 분단을 수용하고 전제한 비적대적 타자 인식, 분단의 평화적 관리와 조정에 대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할 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향후 한국의 평화교육이 한반도 분단을 어떻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순정: 통일해야 한다는 당위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정권교체 이후, 남과 북이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불안도 있지만, 사실 통일이라는 말에 대한 불편함도 존재합니다. 통일을 해야 한다고 배워왔지만, 과연 그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가, 또 통일이 나의 일상에 필요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분단은 현재 한반도의 상황을 표현한 언어입니다. 나아가 남북의 적대적인 관계가 전쟁의 요인이라는 점이 분단 사회가 가진 위험성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국제정치적인 위치와 역사적 맥락에서 분단 상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사회문화적으로 어떤 사회적 분열을 야기하

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분단에 따른 한국 사회의 폭력과 이를 전환하기 위한 대응을 분석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통일의 당위를 강조하기보다는 ‘분단’에 따른 사회적 현상들이 더 적극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평화를 교육한다는 의미와 연결되어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의 근원을 분석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평화교육에서 분단은 한국의 맥락이며 그 맥락에 의해 발생하고 강화되는 차별과 혐오, 배제의 현상에 주목하고 이것을 평화의 맥락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존할 수 있는 정치적, 교육적 전략들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향후 평화교육은 분단에 의해 파생되는 주제들을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우선, 통일교육의 차원이 아닌 평화교육의 차원에서 거시적인 차원과 일상에서의 차원을 연결해 분단의 상황을 이해하게 해야 합니다. 예컨대, 분단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의 문제를 민족적 관점이 아닌 다문화와 인권의 관점으로 재조명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민족의 하나됨이라는 당위에 근거한 통일을 넘어서기 위해 앞으로 분단의 이슈는 세계시민성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단에 의해 만들어진 문화 속에는 타자(예: 북한, 북한 사람)에 대한 적대심이 있습니다. 타자에 대한 적대심은 폭력 행위로 이어지기도 하고, 적대심이 증폭되는 행위에 대해 혐오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혐오의 대상과 갈등은 폭력 행위로 이어지고, 사회의 불안 요소(범죄)로 그들을 낙인찍게 됩니다. 나아가 그 혐오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정치에 대한 혐오가 발생하게 되어 정치 참여에 소극적으로 됩니다. 이러한 양상은 결국 관련된 주제에 대해 무관심을 가져오게 됩니다. 현재 어떠한 북풍 관련 이슈에도 특별히 반응하지 않는 세대들이 많아지고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뉴스가 있어도 크게 반응하지 않는 여론이 그것을 방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 간 갈등이 내재해 있지만 혐오에 지친 사람들이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에 무관심하게 될 때, 그 결과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봤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혐오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곧 분단을 극복하는 일이라는 점, 분단이 유지될 때 우리는 전쟁의 위험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게 하는 교육이 요구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분단의 고리가 탈식민주의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탈식민주의를 개략적으로 이해하자면, 오랜 역사 속에서 식민지배를 받았던 국가의 사람들 사이에 뿌리깊게 자리 잡힌 식민주의 사관으로부터의 벗어나는 것이다. 한국의 역사 속에서 식민주의 사관은 비단 직접 식민지배를 받은 일본과의 역사적 관계뿐만 아니라 이후, 냉전시대를 거쳐 현재 세계화 시대의 신식민주의(neo-colonialism)의 맥락까지 확장됩니다. 여기서 분단은 물리적 식민지배가 끝난 후(독립) 국가가 나누어지면 냉전체제에 종속된 채 머물러 있는 상태라는 점, 나아가 그 지배구조 하에서 신식민주의의 영향을 받아 국제 관계에서 나타나는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한국이 종속되어 있다는 점³⁾에서 분단은 그 자체로 불안정하며 반평화적인 상태라고 이해됩니다. 따라서 평화로운 사회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분단이라는 인식 전환은 필연적으로 탈식민주의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자즈 교수(2022)는 정치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인 평화 부재의 맥락에서 비판적 평화교육의 복원을 제기하였는데, 그 관점에 동의합니다. 즉, 비판적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한반도의 분단이 가진 독특성이 같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전쟁, 비핵화 문제가 국가 간 갈등이 아닌 세계의 과제라는 점을 인지하고 세계시민적 차원에서 어떻게 이러한 폭력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할 것이냐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통일교육도 단순히 북한에 대한 편견을 바꾸주기 위한 교육이나 북한이라는 사회를 왜 바꾸어야 하는지(예: 북한 인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북한이라는 국가와 남한이라는 국가가 폭력을 평화로 전환하기 위해 왜 분단의 상황을 정리하고 재정비해야 하는지, 이를 위해 평화로운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탐색하기 위한 교육적 시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비폭력 대화와 갈등 해결 교육과 같은 평화교육의 실천들이 재조명되어 학생들이 일상에서 우리 사회(나아가 지구)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적대의 대상들을 타자화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 수 있는 역량들을 키워가는 교육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봄

3) 물론, 경제성장으로 인한 세계적인 위상은 올라갔다는 평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적 위상이 높아져 많이 알려졌다는 것과 국제사회의 다양한 정치경제안보 영역에서 나타나는 힘의 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다른 차원의 문제로 조명해야 할 것입니다.

니다. 이를 위해, 평화교육에서 분단은 평화교육의 장애물이자 한국 사회 폭력의 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어떻게 평화·통일에 대한 이해를 바꿀 것이냐와 관련된 것으로 재개념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아영: “이제 한국의 평화교육도 분단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통일’ 과제나 ‘탈분단’ 지평이 아니라 적대성 극복과 화해 공존의 전망에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때의 ‘탈분단 지평’이라는 것은 한반도의 분단만큼이나 명료한 어떤 상태를 전제해 것처럼 읽힙니다. 그 질문에 대해 정확히 응답하려면 질문에 담긴 ‘탈분단 지평’의 정의가 무엇인지 논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피스모모가 ‘탈분단 평화교육’ 개념을 한국 사회에 제안한 후 상당히 많은 논의에 초대받았습니다. 혹자는 ‘탈분단 평화교육’이 통일의 중요성을 퇴색시키는 담론이라고 비판했고, 혹자는 ‘근본 또는 족보 없는 평화교육’이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만, 그와 동시에 ‘탈분단’의 지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흥미로운 토론들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을 마주하면서 저는 ‘탈분단 평화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이 받는 가장 큰 오해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탈분단 평화교육’은 ‘분단’에 관한 것이지만 ‘분단’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련의 탈분단 연구자들이 앞서 고민해 왔던 ‘탈분단’ 개념은 ‘분단 아니면 통일’이라는 이분법으로부터 탈주하여 다른 관점을 여는 주요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피스모모가 제안한 ‘탈분단 평화교육’은 ‘탈분단’이라는 용어 그 자체보다 즉, ‘어떤 존재의 상태(being)으로서의 탈분단’이 아니라 계속해서 ‘탈-분단되는 과정’(becoming)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피스모모가 지향하는 평화교육의 명칭을 정확히 말하자면 ‘탈분단 수행성 평화교육’인데요. 이름이 너무 어렵고 길다는 이유에서 ‘탈분단 평화교육’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행성’에 대한 부분은 잘 다뤄지지 않는 경향도 있는 듯합니다. 이 수행성은 젠더연구자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가 제안했던 것으로 젠더(gender)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라 보았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분단을 고정된 상태로 보지 않고 수행되는 것으로 바라보았던 홍민, 박순성, 조영주 등 수행적 분단론 연구자들의 접근이 평화교육을 하는 피스모모에게는 매우 주요한 통찰을 준 것인데요.

한국 사회에서 국가 주도의 ‘국민 만들기’의 대표적 기제인 ‘국가교육과정’은 만들고자 하는 명확한 국민의 상이 있었습니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라고 명시했던 국민교육헌장만 떠올려 봐도 국가가 원하는 국민의 모습은 명확합니다. 1994년에 폐지된 국민교육헌장을 왜 다시 이야기하는가 하실 수도 있지만, 2022년 10월에도 공직자가 ‘김일성주의자’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대통령이 “종북주사파와는 협치 없다”고 말하는 현실이 존재할 때, 국가가 원하는 국민의 상이 과연 국민교육헌장으로부터 어느 정도나 떨어져 나온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피스모모의 ‘탈분단 평화교육’은 탈분단이라는 단일한 결과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분단되는 현실”을 “탈분단되어지는 현실”로 ‘전환하는 수행’의 과정에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의 ‘탈분단’은 한반도의 분단만이 아니라 단절과 배제를 초래하는 모든 분단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 적합하며 그 모든 분단으로부터 탈주하는 수행적 존재들의 출현을 지지하고자 하는 논의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적대성 극복과 화해 공존의 전망”에 더 집중해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에 깊이 동의하며 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집단안보’라는 개념의 독점적 지위를 해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때의 집단안보는 동맹보다는 넓은 의미로 특정한 집단 내의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집단 내 평화유지를 전제로 협력하며,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공격은 집단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엔이 대표적인 집단안보체제이지요. 하지만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을 보면, 상임이사국들이 행사할 수 있는 거부권의 무게가 너무 큼니다. 집단안보라고 말하지만 패권 중심으로 작동하는 비민주적 관성은 집단안보체제의 낙후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요. 국제사회의 ‘제재’라는 개념이 결국은 ‘왕따’라는 폭력의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 또한 당장 북한의 경우만 보더라도, ‘제재’가 목표하는 결과를 도출하기보다는 인도주의적인 고충을 악화시켰다는 점에서 이 ‘집단안보’가 가지는 허망한 비전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그 독점적 지위를 해체하려는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이 동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대성 극복과 화해 공존의 전망이라는 제안이 힘을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전쟁 종전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분단 상태의 한국 사회의 평화교육은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국가보안법이 실재하는 현실에서 북한을 경제하면서도 통일의 동반자로 바라보아야 하는 이중적 관점은 한국 사회의 평화교육이 적과 아의 이분법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평화교육이 평화부재의 현실에 눈감는 상황은 국가와 군대가 독점한 안보에 대해 충분히 비판하지 못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평화교육이 평화교육일 수 있으려면 동북아의 이웃 국가들에 대한 적대적 타자상을 극복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군사주의를 표방하는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본주의와 군사주의의 치밀한 결합이 어떻게 무력을 도구 삼아 약자들을 주변화하는지에 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삼열: 한반도에서의 평화교육은 분단을 극복하는 통일문제를 도외시킬 수 없습니다. 북한과의 적대관계, 전쟁위험, 무력 경쟁이 지속되는데 남한에서의 적극적 평화만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과의 평화적 통일이나 평화적 공존, 혹은 연방제 통일 같은 문제가 한국의 평화, 한반도 평화의 핵심적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통일교육이 곧 평화교육이냐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의 통일교육인가에 따라 매우 반평화적인 통일교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해서라도 통일을 해야 한다는 식의 통일교육은 결코 평화교육이 아닙니다. 또한 전쟁이나 폭력을 일으킬 수 있는 국가안보교육도 평화교육과는 배치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추진된 통일교육은 반공통일이나 성공통일의 명분으로 흔히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고 흡수통일, 즉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통일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독일과 같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흡수통일이 된다면 모르지만, 베트남처럼 전쟁과 무력을 통해 한쪽이 다른 쪽을 멸망시켜서 얻는 통일을 주장하는 통일교육이라면 평화교육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후로 평화통일교육 또는 분단극복 평화교육 등으로 통일교육의 명칭이나 내용이 바뀌는 것은 평화교육의 차원에서 바람직하고 큰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서 가르치다가, 이제는 함께 살아가야 하는 민족공동체로, 동반자로 이해시켜야 하며 북한의 실정과 장점도 가르치고 이념과 제도가 달라도 함께 공존

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교육은 통일교육보다는 분단체제의 극복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미국과 소련이 나누어서 지배하기 위해 강요된 우리의 분단, 6·15 전쟁과 미국과 중국, 유엔군의 참전으로 더욱 고착된 적대적 분단체제는 항상 긴장과 갈등, 무력 경쟁, 전쟁 위협, 지금은 핵전쟁 위기까지 반평화적인 환경과 요소를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극복되어야 할 것이 우리의 분단체제입니다. 당장의 통일은 불가능하므로 우리는 평화적인 분단체제로 전환해서 상호 교류하고 방문하며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탈분단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평화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의 민족 통일의 이상과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되죠. 한민족, 같은 언어와 문화 습관으로 5천 년을 함께 살아온 우리 민족이 한때 사상과 제도가 다르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분단체제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단체제, 경쟁체제를 유지하는데 쓸데없는 비용,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루속히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 양쪽에 다 유리한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70여 년을 적대와 단절로 지낸 한반도의 분단체제는 벌써 많은 이질성을 산출해서 하나가 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개방과 교류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공동의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통일에 앞서서 필수적인 요건이 됩니다. 앞으로의 평화통일교육은 이러한 방향으로 분단체제 극복, 평화적 공존과 상생, 민족 동질성의 회복, 경제·문화 교류, 협력의 내용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선향: 2022년 10월 초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시기의 통일교육 방침을 수정했습니다. 이를테면, 지난 10월 2일 교육부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제작·배포한 「중·고교 학생들의 북한지역 현장학습을 위한 가이드북」을 전량 회수해 폐기할 것을 강원도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그 책자에 북한의 ‘남침’ 사실 등이 빠지는 등 편향된 내용이 다수 수록돼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시기의 평화·통일교육 관련 자료를 전수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한국의 평화교육이 적대적 타자상과 공세적 대북 안보중심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방향과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평화교육이 평화와 통일을 규범이나 강령으로만 내세우고, 평화부재의 현실에 눈감거나 비평화 교육과 공존했던 관성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은 정반대로 한국의 평화교육은 북한 또는 중국, 심지어 일본에 대한 적대적 타자상을 극복하되 그 국가들의 잘못된 정책이나 정치 현실에 대

해서는 더 비판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문아영: 평화교육이 평화와 통일을 규범이나 강령으로만 내세우면서 평화부재의 현실을 외면하거나 비평화교육과 공존했던 관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평화교육’이라고 일반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경험이 한국 사회에 과연 축적됐는가에 대해 다시 질문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호명하는 ‘평화교육’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평화교육이라고 했을 때, 그 실행 주체는 누가 되는 것일까요? 만약 국가교육과정이라면 평화교육 그 자체가 국가교육과정으로 오롯이 존재한 일이 아직 없었고, 개별교사들이 따로 또 같이 교육의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해왔던 평화교육이라고 한다면 그 교육의 내용들이 관성적이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 이 질문이 전제로 하는 ‘평화교육’이 통일부 주도로 진행되어 온 ‘통일교육’과 유사한 선상에서 설정된 개념이라면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봐요. 국가 주도의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이지 평화교육이 아니니까요. 물론 교집합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등치될 수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북의 자원과 남의 기술력이 만나 부국강병을 실현하자는 꿈은 매우 국가주의적이면서 군사주의적이잖아요? 이런 꿈을 꾸게 하는 동시에 북을 계속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강조해 온 그동안의 국가 주도의 ‘통일교육’은 한국 사회에서 ‘평화’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할 공간을 축소하는데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한반도에서 상상하는 평화가 남북 사이의 경계를 넘는데에는 성공했어도, 한반도를 넘어서는 상상력은 부재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어디까지나 민족 중심의 상상력이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평화교육이 비평화교육과 공존하고, 평화부재의 현실을 외면했다고 보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병역거부운동, 군축운동, 비핵/반핵운동, 기지건설 반대운동, 파병반대운동 등 소수의 평화단체들이 다양한 평화운동들을 통해서 평화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그 경계를 밀어내는 작업을 해왔고 그 과정들은 한국 사회에 여러 불편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불편함을 소화해내는 과정이 곧 학습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질문을 받으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평화교육을 학교 교육에 국한해 상상하는 것이나 평화교육을 공식적 교

육과정으로 제한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평화교육이 되어가야 할 그 모습을 논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의 ‘평화교육’ 경험치는 얼마나 되는 걸까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정말 ‘평화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들은 얼마나 될까요?

권순정: 기실, 평화·통일 교육은 정권과 대북정책 기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교육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평화교육은 ‘평화’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비판적으로 국제 정치를 읽어내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힘의 불균형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평화교육은 현재와 같은 반공주의라는 오래된 이념에 근거한 안보론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때 평화교육과 평화운동의 차이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운동과 평화교육의 역할을 칼로 자르듯 나눌 수는 없지만,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정치적 의제를 던지는 역할을 평화운동이 적극적으로 이끌어 간다면, 평화교육은 점진적으로 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비판적인 목소리는 어떻게 내야 하는 것인지 등 성찰과 사유 능력을 길러내는 활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평화교육은 평화운동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그와 관련한 인식과 태도를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옮기게 할 것인지 등의 점진적인 전환 과정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현재 상황을 보면 사실 긴박하게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반공주의에 기반한 안보론과 더불어 한미일 공조 강화 속에서 과거사에 대한 청산 없이 진행되는 미래만을 강조하는 분위기는 국제사회와 한국 내 평화에 있어 불안한 요인들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맞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어 평화로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한국의 역할, 한국 사회 내에서의 변화를 이끌고 나가는 평화운동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길 희망합니다.

동시에 그것이 왜 반평화적인지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학습자나 시민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교육 전략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분단국가로서 가진 한계에 대해 분단을 극복(통일)해야 한다는 당위만을 주장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목소리를 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탈식민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왜 현재의 국제정세가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되는지를 ‘읽어낼 줄 알게 하는 것’이 평화교육이 책임져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이삼열: 제가 세대 차이를 조금 느낍니다. 저는 10살 때 6.25를 경험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암흑시대였죠. 박정희 독재와 전두환 독재에 맞서 싸우면서 민주화운동을 하고 평화통일 얘기를 해 온 저 같은 사람과 1990년대나 2000년대 와서 그런 주제를 접한 분들은 서로 감각이 조금 다를 겁니다. 민주화도 좀 되고 어느 정도 북한과 교류도 하고 이랬을 때 분단체제를 경험하는 사람들과 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좀 전에 ‘탈분단’ 얘기가 나왔는데 예전에는 ‘탈분단’이라는 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논문 쓰면서 한 용어가 기껏해야 ‘분단극복’이었습니다. 분단체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통일도 될 수 있고, 또 평화공존도 될 수 있고, 또 이 적대적인 분단을 조금 더 완화하는 것도 사실은 극복이기 때문입니다. ‘극복’이라는 개념은 사실 굉장히 폭넓은 개념입니다. 이전에 제가 그 용어를 썼죠. 탄압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말입니다. ‘분단극복’을 가지고 빨갱이로 몰 순 없잖아요. 그랬는데 ‘탈분단’은 좀 복잡해집니다. 아마 통일운동하는 사람들이 조금 반대를 할 거예요. ‘탈분단’이라는 게 뭐냐고 따질 수 있습니다. 통일을 말하느냐 아니면 통일을 안 하면서 분단체제를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논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남북 양쪽이 다 적대적인 분단체제를 유지했고, 한쪽이 한쪽을 완전히 짓누르고 없애는 그런 교육을 쪽 해왔기 때문에 이런 적대적인 분단체제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것이 저한테 가장 핵심적인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적대성을 조금 완화하는 것이 일단은 평화교육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저쪽은 공산주의자고 우리가 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들하고도 어떻게 우리가 전쟁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리고 그들과 서로 접근하면서 공존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러니 차츰 우리 동서독 관계의 발전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화해를 통한 서로의 관계를 발전한 역사를 우리가 본받자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88선언’⁴⁾을 쓰면서 5대 원칙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저는 우리가 북

한과 화해하고 공존해야 한다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제가 KBS 심야토론회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김일성을 악마화하는데 김일성 얼굴을 본 사람도 없다. 김일성을 욕하기 전에 김일성 얼굴부터 좀 보여줘라고 말했어요. 김일성 얼굴을 KBS에 비치면 아마 북한에서도 노태우 대통령 얼굴을 비치 거다, 그렇게 해서 서로 알아야 무슨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안하고서 그냥 욕만 하고 악마라고만 하면, 남북이 어떻게 되느냐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후 정보기관에 불러갔어요. 그곳에서 밤새 심문당하며 고초를 겪었습니다.

6·25전쟁을 비롯해 역사 관련 사실을 제대로 밝혀야 합니다. 왜곡되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역사교육 또는 역사에 대한 진실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25전쟁은 북쪽에서 침략해 발생한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도 사실 북진통일을 많이 주장했어요. 남쪽도 준비가 되면 북쪽을 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때를 놓쳐서 우리가 당한 거지요. 어쨌든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한쪽의 책임을 부각하는 것으로 왜곡해서 역사를 쓸 수는 없습니다.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어떤 말을 하면 빨갱이로 몰리고, 중북으로 몰리고, 주체사상가로 몰리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과제입니다. 평화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짐을 진 겁니다. 아직도 협박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평화교육입니다.

이선향: 한국 평화교육의 역사와 현실과 관련해 선생님들께 각기 개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평화운동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평가와 선생님들의 활동과 관찰을 결합해 말씀해주시면 유익하겠습니다.

❶ 이삼열 선생님께: 선생님은 한국 평화운동과 평화교육의 개척자입니다. 선생님께서 수행하시거나 경험하신 지난 시기 한국 평화교육의 성과와 의의 및 곤경과 한계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문화아카데미⁵⁾의 현재 활동과 전망도 알려

4) 1988년 2월 29일 서울 연동교회에서 열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회는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회 선언’을 발표했다. 그것은 약칭 ‘88선언’이라고 불린다.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이어갈 후배 연구자와 활동가들에게 도움말도 요청합니다.

이삼열: 제가 1982년에 독일에서 돌아와서 평화 문제에 관해 글을 쓰고 강연하고 다닐 때 아직 한국에는 대학이든 교회든, 시민사회 어디에서도 평화연구소나 평화교육 기관이 없었습니다. 다만 경희대학교가 조영식 창시자의 사상과 유언을 통한 국제평화, 오토피아 사상을 보급한다고 했죠. 그래서 경희대학교에 평화연구소가 생겼어요. 일단 저는 주로 기독교 교회, YMCA, YWCA, 크리스천 아카데미 등 사회 교육기관을 통해서 유럽에서 번지고 있는 반핵평화운동을 소개하면서 한반도의 반핵, 군축, 동서독 방식의 평화체제를 설명하고 의식화하기 위한 노력을 조금 했습니다. 마침 1980년 광주민중 학살 사태 이후에 열화 같이 일어난 학생들의 통일운동과 기독교계 일부에서 KNCC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된 평화통일운동이 저에게 많은 기회와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는 요한 갈통(Johan Galtung)이나 디터 쟁하스(Dieter Senghaas) 등의 평화론과 서구의 평화연구와 평화교육 등의 서적을 읽으면서 공부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KNCC의 통일연구소 전문위원이 되어서, 1988년 교회의 평화통일선언문 작성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1984년부터 국내 학자와 전문가들 및 미국, 일본, 독일의 학자들과도 협의하면서 수년간 한반도 분단과 통일을 논의하고 공부했습니다. 우리의 ‘88선언’을 통해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통일문제 논의가 활발해졌고, 1988년 7월 7일 노태우 정부의 ‘77선언’도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통일문제는 얘기해도 되는 상황이 열렸습니다. 통일논의가 자유화되면서 평화 문제도 조금은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교회, 시민사회에서 순식간에 통일논의와 평화 이슈가 등장했습니다.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에 독일이 통일되고, 1991년 소련 체제가 무너지고 동서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한국의 평화통일운동도 급격히 발전했습니다. 평화교육에 대한 요구도 많아져서 여러 기관에서 평화교육이 개시된 것도 바로 1990년대 초입니다.

5) 대화문화아카데미는 1965년 기독교의 사회 참여와 교회와 사회의 대화와 인간 소의를 극복하는 인간화를 표방하며 설립된 크리스천 아카데미(Christian Academy)의 후신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가 사회철학을 전공한 저에게 평화운동과 평화교육 문제를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발표하며 토론하는 장을 마련해주었습니다. 저는 당시 몇 가지 저서를 출간했지만, 제 연구와 강의는 계몽적인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평화학자로서의 전문성은 부족했습니다. 저는 당시 계몽적 강연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수십 번, 내지 수백 번 하느라고 더 깊이 연구하지 못했습니다. 반핵평화운동이나 남북한화해와 평화 체제를 강의하다 보면 잘못된 반공주의 선전이나 왜곡된 북한관을 비판하게 되니까 용공 분자나 친북인사로 욕을 먹고 비난당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평화운동과 평화교육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수난을 당하고 오해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나마 이만큼 발전한 것도 상당한 성과입니다. 다만 아직 젊은 연구자나 교육기관이 매우 부족합니다. 더욱 보수화되는 정치 구조에서 평화학과 평화교육이 명맥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강원대학교에서 평화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며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제가 일하는 대화문화아카데미는 1990년대부터 기독교와 언론계, 시민사회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서 동아시아의 평화공동체나 한일 간의 평화와 협력,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평화교육의 방법과 발전 등의 문제를 가지고 토론 마당을 열어서 의식화와 여론 형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비슷한 운동과 포럼, 대화 마당이 여기저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역할 분담을 하면서 효율적인 공동 작업과 연구 및 교육을 실천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이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요람의 역할을 하면 매우 기쁘겠습니다.

② 권순정 선생님께: 국내 평화교육은 대체로 분단극복을 중심으로 한 흐름과 다문화 가정, 일상폭력, 또는 국가폭력이나 인권을 다루는 흐름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평화운동의 다양한 흐름들은 서로 잘 접속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와 같은 국내 평화교육의 양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분단과 통일 중심의 평화교육이 보다 다양한 주제들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또 평화교육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주시면 유익하겠습니다.

권순정: 현재 국내 평화교육에서는 분단극복과 통일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된 분야인 다문화, 일상에서의 폭력, 인권(국가폭력)의 흐름들이 서로 구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화운동이 그 흐름을 잘 접목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것은 평화운동과 평화교육을 어떻게 구분하고 그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또한 관련한 다양한 경험 연구들이 필요한데, 평화교육 연구들은 주로 담론과 철학 논의, 평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에 한정되고 있고, 거시적인 평화의 부재가 어떻게 일상에서 반영되고 재생산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 연구는 많이 부족합니다.

경험 연구가 발표되면 그것은 결국 평화교육의 학문적 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는 관심으로 이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앞서 언급한 변혁적 교육들 - 세계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인권교육 등 - 과의 관계를 다각도로 해석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실천 양상과 한계, 성과 등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교육학 영역에서 평화교육 프로그램들이 각각 어떻게 실행되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수준의 연구뿐만 아니라, 정책 및 교육 개혁의 틀 안에서 어떻게 작동되었는지를 보는 연구들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험연구들을 통해 지금까지의 평화교육의 성패를 논하기보다 성과와 과제를 제시하고, 전반적인 교육 담론의 흐름 속에서 평화교육을 어떻게 위치 지을 것이냐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그 방향과 틀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③ 문아영 선생님께: 선생님이 대표로 계신 피스모모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 평화교육에 큰 자극을 주었습니다. 비위계적 교육 관점과 놀이나 상황 연극의 교육 방식은 특히 교사들과 학교 현장에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아마도 올해가 피스모모 창립 10주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선생님은 그동안의 피스모모 활동 역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의미 있는 성과를 주로 알려주시되 장벽이나 오류가 있었다면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스모모의 전망과 과제도 궁금합니다. 평화교육을 실천하거나 모색하는 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제언도 기대합니다.

문아영: 피스모모는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는 의미를 그 이름에 담고 시작된 단체입니다. 미하엘 엔데(Michael Ende)의 소설 ‘모모’의 의미도 담겨있고요. 피스모모는 가르치지 않는 평화교육을 모토로 삼고 지난 10년간 11만여 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서로배움의 자리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식 중심의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닌 다양한 존재들이 만남과 대화를 통해 서로배우는 경험, 차이가 긴장할 이유가 되지 않는 안전한 배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때의 서로배움은 형식적 교육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상의 모든 만남에 적용되는 것이고요.

피스모모가 서로배움에 집중하는 이유는 폭력의 발현이 누군가를 대상화하는 순간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내 앞의 존재를 그저 가르칠 대상, 명령하고 지시할 대상으로 생각할 때 발생하는 권력 독점은 그 눈앞의 존재를 타자화하고 비인간화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피스모모의 평화교육은 서로배움과 낮설게하기에 집중합니다. 익숙한 권력관계를 낮설게 보고, 마주한 존재로부터 배우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은 일상의 모든 관계에서 작동하는 일방적인 권력관계, 위계와 서열 중심 문화들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는 강력한 경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피스모모의 교육과정이자 철학인 P.E.A.C.E 페다고지를 통해 지난 10년간 꾸준히 실천되어왔고, 이것이 피스모모가 가장 잘해온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피스모모는 군사주의에 대한 알아차림, 군비경쟁에 대한 정보, 국가의 군사적 수단을 통한 안보 독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평화교육의 주요 주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주제를 ‘가르치는 형태’로 진행하지 않고, 배움의 과정에서 ‘적-아 이분법’에 익숙해진 세계관을 낮설게 보고, 스스로 그 관점이 작동하는 방식을 알아차리는 것에 익숙해진 후에 단계적으로 ‘안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국가가 안보에 대한 해석과 결정권 모두를 독점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논의를 하는 과정까지 이어가지요. 이런 문제의식은 한국 정부만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국민국가 체제 그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이면서 ‘우리’라고 하는 정체성의 형성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여서 결국 그 문제제기는 ‘나’를 향해 있기도 해요.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의 문제도 아닐 수 있는 주제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이겠고요. 피스모모는

앞으로도 그 일을 계속해나가겠지요.

지난 10년간을 돌아보며 아쉬운 점이 있다면, 피스모모의 프로그램을 경험한 분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 대한 말 걸기를 할 때, 군비축소, 전쟁의 무용함, 국가안보 담론의 편향성과 한계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대중적으로 담아낼 언어의 그릇을 아직 잘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국가가 사용하는 방어를 위한 군사력 강화라는 언어는 ‘혹시라도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을 양분 삼아 바로 눈앞에 보이고 만져지는 무기들을 통해 지속적인 지지를 얻지만, 전쟁이 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평화운동의 언어는 막연하고 추상적으로만 들리거든요. 실제로 전쟁이 군수산업체를 제외한 대다수 존재에게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이해할 만큼의 합리성이 시민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이라는 상황을 가정하게 되었을 때, 평화운동의 언어들이 힘을 잃지요. 이 부분은 피스모모가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 더 세밀하게 언어의 그릇들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지난 시간 동안 늘 어렵고, 쉽게 풀리지 않는 영역이었어요. 지금도 물론 그렇고요.

이선향은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다. 한국정치와 비교정치를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문화도시와 로컬 거버넌스: 패러다임 전환은 진행 중인가?〉, 〈한국의 정치세력 간 정치갈등: 게임이론적 접근〉, 〈‘금강산 찾아가기’ 담론의 사회적 구성과 실천〉, 〈한국사회 인권거버넌스의 구축과정과 관료화〉 등이 있다.

권순정은 영국 버밍엄대학에서 박사학위논문으로 「한국 학교교육에서 폭력과 평화교육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Violence in South Korean schools and its relevance to peace education)」를 발표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고, 현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객원강의교수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강의하고 있다. 평화교육 관련 대표 역서로 「평화교육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그리다(Encyclopedia of peace education)」가 있다. 최근 주요 관심 연구 분야는 평화교육과 교육개혁,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미래교육, 학생인권과 학교폭력 등이다.

문아영은 평화/교육 연구기관인 피스모모의 대표다. 대표저서는 『분단체제를 살아내며 넘나드는 탈분단 평화교육』(공저)이다.

이성열은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현재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을 맡고 있다. 대표저서는 『해외에서 함께 한 민주화운동』이다.